

韓·日間 技術移轉의 意味



金 成 斗
〈조선일보논설위원〉

우리나라 기술발전의 문제의 일환으로 技術移轉의 문제를 중대시해야 할 것으로 여긴다. 기술이전이라면 으레 우리의 뇌리를 스치는 것은 韓·日間의 기술이전문제이다. 여기에 대해선 우리국민들 속에 오해가 있다. 왜 안주겠다는 것을 치사스레 달라고 졸라대는 것인가고 反論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 안준다면 안주는대로 스스로 개발할 길을 택할 일이지 안주겠다는 것을 달라고 졸라대는 것은 수치스런 것이 아닌가고 하는 것이다.

사실 최근들어 韓·日間 교섭에서 언필칭 거론되는 기술이전문제가 마치 기술을 구걸하는 것 같아 民族感情을 건드리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을만도 하다. 싫어하면 단곳에서 구해오던지 스스로 개발하던지 아니면 없이 건디는 도리밖에 없지 않느냐고 하는 反論은 그것만으로서서는 충분히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론으로서서는 타당한 근거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韓·日間의 구체적인 실재를 감안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단순치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韓·日間國交正常化 이후 두나라 사이의 경제관계는 일본의 과분한 對韓黑字貿易일변도 정책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나있다. 그동안 크기는 6대1, 작게는 2대1이상의 지나친 赤字貿易을 강요당하면서 꼭 20년의 풍상이 흘렀다. 그 결과는 국교정상화 이후 對內赤字의 累計는 3백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세계최상위권에 든다는 우리나라 對外債務의 3분의2 이상이 對日貿易에서 빚어진 것이다.

우리가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무역불균형의 시정을 촉구해온 것은 그 때문이다. 거기에 대해 일본측은 언필칭 韓·日間의 경제구조와 한국경제의 상대적인 발전단계적 낙후성이 불균형무역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는데야 어떻게 하느냐고 대꾸해 왔다.

한국경제가 구조적으로 낙후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살 것이 너무 많고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사갈 것이 없다는 말투이다. 그런데 만약 일본측의 말마따나 韓·日間の 무역불균형이 구조적인 문제라면 산업구조적으로 고질화한 對日依存的 수입구조인들 쉽사리 고쳐지지 못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거기에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지만 일단은 그렇다고 치자.

마치 무슨 올라미에 씌운듯 과대한 적자를 무릅쓰고도 對日依存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에 우리의 고민이 있다. 그런데 그런 고질적인 對日依存的 산업구조가 무엇에 연유하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길게는 植民地시대를 포함한, 그리고 가까이서는 修交 이후 20년의 對日經濟關係에서 조성된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장기적으로 한국경제를 일본 생산력의 안정된 시장으로 확보하려는 적극적 의도가 담겨져 있었으리라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의존적인 시장구조를 溫存, 擴大코자하는 것은 지배적인 위치에 선 경제로서는 거의 본능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에 대해 우리가 技術移轉을 요구하는 것은 일본이 장기적인 市場關係의 과정에서 조성한 고질적인 對日依存的 = 對日赤字貿易一邊倒의 경제구조에서 재빨리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제품, 半生原料, 기계 및 부품등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생산과 수출을 지탱하기 힘들고, 그러면서도 대일수출은 여의치 않는 이 기술적인 낙후성 = 의존성을 탈피하는데는 역시 對日輸入品の 우리 국내 생산대체를 위한 일본 기술의 도입이 불가결한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일본기술에 의해 강요된 의존성이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독립성의 요구가 정당한 것처럼 경제적인 의존성을 조성한 주체에게 그 의존성의

탈피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前者 못지 않게 정당한 것이다. 기술이전은 바로 그것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술수준이 향상하는 것은 우리의 對外支拂能力의 강화를 통해 兩國間交易을 확대균형으로 유도하여 일본측에도 유익하다는 데 대해 일본측도 短見에 사로잡힌 오해를 씻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 거부반응 비슷한 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사태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안주겠다는 데 대해 달라고 줄라대는 것이 치사스런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경우엔 안주겠다는 것이 치사스럽지 달라는 것은 치사스런 일이 아닌 것이다. 韓·日間貿易을 축소조정하자는 것이라면 또 모른다. 적어도 확대균형으로 유도하자면 기술이전에 의해 일본시장에 대한 개척을 가능케 해주어야 할 것이다. 만약 對日赤字가 구조적이며 발전단계적인 격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그길 말고는 달리는 적자축소의 길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하긴 나는 韓·日間の 무역불균형이 모두 구조적이며 발전단계적 요인에 뿌리박고 있는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 關稅·非關稅障壁이 한 국상품에 대해서는 유달리 높다는 것은 조금도 새로운 사실일 수가 없는 것이다. 구조적 내지 발전단계적 요인은 거기에 걸친 것이다. 그러나 아무튼 구조적 요인이 겹쳐 있다는 것이 사실일진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은 의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물론 兩國間交易을 축소균형으로 유도해 가자는 것이라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技術移轉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韓·日間기술이전에 대해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측의 이해를 바라마지 않는다.